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서석영 의원 외 19명)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석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0
----------	-----

발의연월일 : 2024. 2. 16.

발 의 자 : 서석영·남영숙·김일수
박선하·이춘우·강만수
김대진·이형식·이철구
배진석·정근수·이철식
노성환·신효광·이충원
최덕규·황두영·최태림
남진복·박순범 의원
(20명)

1. 제안이유

-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음주는 도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음주는 도민의 안전과 공공시설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8조)
- 마.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 예산입법담당관(예산입법담당관-40, '24. 1. 9.)
-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정책기획관-339, '24. 1. 9.)
- 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무혁신담당관(정책기획관-339, '24. 1. 9.)
- 라. 해당부서 의견: 검토완료
 - 보건정책과(정책기획관-339, '24. 1. 9.)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심한 소란과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과 무질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그 밖에 도지사가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상북도 도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금주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용이를 위해 해당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금주구역 운영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금주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주류를 제공·홍보하는 등의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 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지사는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안 제4조제1항)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8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5조제1항, 제13조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규모를 알기 어려워 비용추계서 작성에서 제외됨.

4. 작성자

- 보건정책과 지방보건주사보 권상구 (054-880-3790)



경 상 북 도



수신 보건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건전한 읍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 보건정책과-33947(2023.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건전한 읍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읍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읍주 청장구역 지정 및 운영, 교육, 홍보 등에 비용이 수반 될 것으로 추정되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다만, 해당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반 사항 발생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비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검토 및 예산부서와의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경 상 북 도 지 사

관인생략

주무관	경오순	예산총괄담당	권미숙	예산담당관	전영 2024. 1. 2. 윤희만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55	(2024. 1. 2.)	접수	보건정책과-90	(2024. 1. 2.)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7	/ jov6271@korea.kr	/ 대국민 공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